

“美·中 무역전쟁… 韓 ‘무역다변화’ 해야 생존”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없앤다” 추석 앞두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4일~9월 14일 진행된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승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으로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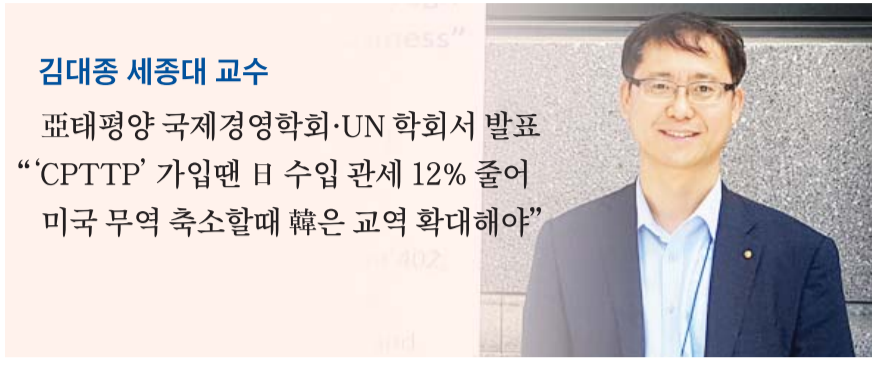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무역다변화를 통해 생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사진)는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국제경영학회와 UN이 공동 개최한 ‘2018 APAIB-UN 공동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역다변화이다’ 주제 논문에서 “2017년 기준 한국은 수출 5737억 달러, 수입 4784억 달러로 953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 50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무역을 축소하고 교역을 줄일 때, 한국은 교역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역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3월 칠레에서 체결된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는 등 무역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CPTPP에서 탈퇴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CPTPP 가입을 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12%를 줄일 수 있다. CPTPP는 한국을 포함해 환태평양 11개국 중 6개국이 서명하면 자동 발효된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 일부 개방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에서 10배를 올려 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의 자동차관세 인상이 실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과 축산물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자동차관세는 2.5%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신 “미국에 대한 자동차분야 수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운수업종 기업들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과거 FT A 체결시에도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약

1000억 원을 피해 업종에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32%)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국가 다양화해 위기를 극복했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은 아세안, 서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반도체 상산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교역확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미·중 무역충돌을 계기로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역 증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5000만 이므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만이 살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토부-LH 국민 아이디어 공유·반영 ‘스마트 시티’ 사전 행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WSCW)’와 연계해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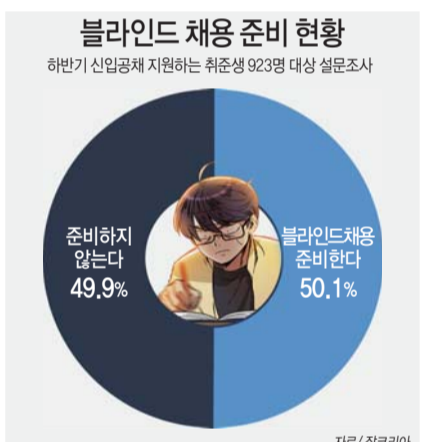
WSCW 사전행사는 ▲대국민 토론회 ▲해커톤 ▲공모전 3종(BI, 사진, 그림 그리기)으로 구성된다.

대국민 토론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참여 방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오는 30일 세종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채보화 기자 chb@1010

취준생 75% “블라인드채용 준비 막막”

잡코리아 취준생 923명 대상 설문 10명 중 8명 “블라인드 지원할 것” 전형 대비법 1위 이력서·자소서 NCS 등 필기시험 준비 뒤이어 사회과학·경상계열 전공 많아



올해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려는 취준생 79%는 블라인드 채용전형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한다는 취준생은 이보다 적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취준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잡코리아가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준생 92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9일까지 ‘블라인드 채용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3%가 하반기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20.7%로 소수였다.

취준생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블라인드 전형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이보다 적었다. ‘블라인드 채용 준비하고 있나’고 묻는 결과, 절반 가량인

50.1%만 ‘그렇다’고 답했다.

전공 계열별로 보면 ▲사회과학계열(59.1%) ▲경상계열(54.7%) 전공 취준생 그룹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인문어학계열(42.1%), ▲이공학계열(48.1%) 취준생들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한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의 블라인드 전형 대비법(복수응답)은 ‘블라인드 이력서·자소서 준비(52.6%)’, ‘NCS 등 필기시험 준비(42.6%)’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인터넷 강의/학원 수강(28.1%)’, ‘블라인드 채용 관련 설명회 참석(23.8%)’ 등의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블라인드 전형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결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80.7%)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취업 스펙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33.2%), ‘나에게 불리한 채용 전형이어서’(26.2%) 등도 블라인드 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입공채 취준생 중 74.8%가 블라인드 채용전형 준비에 막막함을 느낀다고 답했다”면서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 확산될 지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88.0%)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 군까지 확산될 것이라 예측이 37.1%로 가장 많았고 ▲취업시장 전체에 확산될 것(31.0%), ▲공기업·공공기관에만 확산될 것(19.9%)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용수 기자

해수부 ‘수산 新유통망’ 만든다 소비자분산물류센터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권역별 소비자분산물류센터 6개소를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분산물류센터(FDC)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대도시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이다.

센터는 권역별로 수산물의 보관, 가공과 판매 등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에 인천, 호남권에 나주 등 2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소비자분산물류센터는 올해 11월께 인천 중구에서 착공돼 2020년 문을 열 계획이다. /이범중 기자

‘진술거부·번복’ 드루킹 조사, 송인배 소환서 돌파구 나올까

백원우靑 민정비서관 소환 계획

드루킹 댓글조작 등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하면서 청와대가 내린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12일 오전 강남 소재 사무실에 송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간담회 참석비 200만원에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 낙마한 2016년 6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정책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소개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송 비서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016년 6월~2017년 2월 4차례에 걸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났고, 2016년 1월과 같은해 11월 현금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2016년 열린 4·13 총선에서 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인 지지활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수행총괄팀장을 지내며 드루킹과 추가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드루킹이 측근

인 윤모·도모 변호사를 대선캠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9일~10일 이어진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

드루킹은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 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을 바꾸고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직후 회식비 100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 조사를 마친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소환할 계획이다.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거절한 김 지사를 협박한 드루킹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다는 의심 받는다. /이범중 기자